

일본의 전력·가스개혁

- 일본정부는 2015년 3월 3일 전력·가스개혁 관련 법안을 각의 결정
- 전력가스개혁의 핵심은 전력과 가스의 분사화, 요금규제 철폐, 자유화 등인데, 자유화가 반드시 요금인하로 어지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평가

□ 10조 엔 규모의 가정용 시장 개방

- 일본정부는 3월 3일 2020년 전력 9개사의 발전 부문과 송배전 부문을 분리하고, 3개 도시가스사에도 2022년에 도관부문의 분사화 등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등의 개정안을 각의 결정
- 또 가정용 전기요금을 국가가 인가하는 규제도 철폐하기로 함
- 이에 따라 전력·가스 시장에 hetero종이 참여하기가 쉬워져 현재 지역독점 하에 있는 약 10조 엔 규모의 가정용시장이 개방됨

□ 전력과 가스의 분사화

- 개정안의 핵심은 전력과 가스의 분사화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서, 전력은 2020년 4월부터 송배전 부문을 분사화
 - 지금처럼 송배전 부문이 대형전력업체에만 한정되게 되면 송배전의 이용료가 상승하여 신규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
 - 도시가스는 2017년에 가정용 시장을 포함하여 전면 자유화하고 2022년 4월 동경, 오사카, 토호(東邦)등 3개 업체의 도관부문을 분사화

□ 요금 규제 철폐

-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금인가 규제를 2020년 4월 이후에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고

있어, 현재 지역독점상태에 있는 가정용전력 요금과 서비스 등이 대폭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음

- 예를 들면, 가스회사가 전력에 참여하면 전력과 가스를 세트요금으로 한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음
-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구입자에게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 등도 가능해짐
-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전역에서 원전이 중단, 가정용 전기요금이 지진 이전에 비하여 약 20%, 기업용은 30% 상승
- 가스요금도 구미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음
- 이에 일본정부는 전력과 가스의 상호진입과 이업종의 진입을 촉진,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임

□ 전기·가스의 세트판매 등 소비자의 선택범위 확대

- 전기·가스의 세트판매와 재생가능에너지만을 사용한 전기 등 다양한 메뉴가 등장하게 되어,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됨
- 경쟁이 촉진되면 요금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한편, 일본보다 먼저 자유화된 유럽에서는 요금을 인상시킨 사례도 있어, 적절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음
-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, 60년 이상 계속된 전력·가스의 지역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, 2016년에 전력, 2017년에 가스의 가정용 시장이 자유화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
- 자유화와 동시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전력과 가스의 일체 계약임
 - 동경전력과 동경가스가 제공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외에, 중부가 지역기반인 토호가스도 전력소매사업에 참여할 방침을 굳힘
 -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아이치현, 미에현 등 3개 현에서 이르면 2016년에 전력과 가스의 세트판매를 시작

-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거나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더라도 같은 전력·가스회사와 계속 계약할 수 있게 됨
 - 신전력회사(PPS) 에네트는 2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음
 - 부동산회사가 이사할 때 전력, 가스계약도 권유하는 사례도 나올 전망
 - 자유화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요금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, 미국 등에서 보급된 전기요금의 비교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
 - 일본에서는 주택설비설계회사인 에프코가 인터넷상에서 전기요금 플랜의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음
- 소비자와의 접점인 소매부문에서는 신규진입 움직임이 잇따르는 한편 과제도 많음
 - 개정된 법안에는 대형 업체들에게 전기나 가스의 배송설비를 업체별로 분리하도록 의무화했음
 - 이에 따라 전력재편이 활발해져 각사들의 송배전설비 등을 통합하면 사업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

□ 전력소매업 2016년부터 전면자유화

- 전력소매업에 대한 진입자유화는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해왔으나,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가정용도 포함하여 전면자유화하기로 결정
 - 동경시내 가정의 경우 전력의 구입선은 동경전력에 국한되어왔으나 2016년 전면자유화 후에는 신규업자 등 이외의 전력회사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
- 일본 정부는 1995년 이후 대형공장 등 대고객을 시발로 전력과 도시가스의 자유화를 실시, 현재 자유화율은 가정용 등을 제외하고 전력이 62%, 가스는 64%임
 - 가정용시장은 마지막까지 대형 전력업체와 가스업체에 의한 지역독점이 계속되고 있으나, 2016년에는 약 8조 엔 규모의 가정용전력시장, 2017년에는 약 2조 엔의 가정용 가스시장이 자유화됨으로써 개혁이 일단락

□ 자유화가 반드시 요금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음

- 그러나 자유화로 반드시 요금이 인하된다는 보장은 없음
 - 영국에서는 1999년에 전력 소매를 전면 자유화한 이후 2013년까지 전기요금이 물가상승의 영향 등을 제외하더라도 1.5배로 상승
 - 한편, 독일은 물가상승분 등을 제외하면, 자유화이후 15년간 전기요금이 11%정도 하락
 -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에 의하면, 영국은 일부 전력회사의 과점화가 진행되었으나,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기업 간 경쟁이 이루어졌음
- 영국에서는 대형 전력업체가 도매전력의 가격을 조작하는 등 시장경쟁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음
-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5년 가을 전력자유화 이후 전력시장을 감시하는 새로운 기관을 발족시켜 경쟁 환경을 정비해나갈 계획임
 - 새로운 기관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발휘, 공평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성패의 관건임

□ 시사점

- 전력개혁의 핵심은 전력과 가스의 분사화에 있음
 - 전력과 가스 공급에 참여한 기업들이 기존 전력회사와 가스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송전선과 파이프라인을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데, 송배전 및 파이프라인 분리는 이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
 - 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과 관련하여, 분리 후 송배전회사와 파이프라인 회사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중요
 -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하면서 동시에 송전선이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
 - 또 송배전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실시될 필요도 있음

- 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다양한 사업의 참여를 촉진, 사업의 경계를 넘어 요금과 서비스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개혁이 보조를 맞추어 추진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5.3.4)